

## 투데이 칼럼

##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반대에 부쳐

전국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수단으로 '기업유치'를 끊고 있다. 유·무형 공력을 총동원해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기업유치는 '안정적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파급효과 증대'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기에 그렇다.

고창군도 기업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고수면 육토에 '고창일반산업단지'를 구축하고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해 기업유치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현재 55%의 분양률을 달성했다. (※동우파트너이글) 그 중 한 곳이다. 동우팜은 고창일반산업단지 17만7439㎡(5만3760여평)에 총 2500억 원을 투자해 총 9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제시하며 입주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2020년 12월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동우팜이 공장을 준공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경우 연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직접고용 노루비 205억 원, 간접고용 부산물 사내도금 노루비 110억 원, 생물운송 물류비 94억 원, 냉동차량 물류비 108억 원, 지역 상인 및 환경업체 소모품비 구입 24억 원 등 총 631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 고창으로서는 결코 적은 규



천 선 미  
고창군 부군수

모가 아니다. 더욱이, 동우팜은 임직원 자녀학자금과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계열농가 시설현대화사업자금 지원용자 지원, 고창군민 우선제공, 각종 지역행사 지원·간접 참여, 지역상생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시했다. 당시 추진단은 동우팜의 투자결정을 환영했다.

그런데 2020년 5월 고수면농민회와 경영인회가 주축이 되어 '투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에 나섰다. 모든 사안에는 찬·반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약취 때문에 창문도 못 열다 ▲폐수 등의 문제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이 취소될 것이다 ▲공업용수 공

급으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하루에 1만 톤의 폐수가 방류되어 청정고창이 오염된다 ▲동우가 들어와도 외국인들만 일할 것이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어 군민 재산권이 피해를 입게 된다 등이다. 고창군도 지역주민 입장에서 똑같이 고민했던 내용들이다.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동우팜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고창군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 산업집적법, 제33조(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등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검토했고, 동우팜 측에 그 내용을 전달했다. 또, 지역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후 설계반영 ▲주민의견 수렴 후 설계 반영 ▲환경전문위원회 구성과 환경시설 검증 ▲외부기관 정기검사

실시 ▲환경감시단 감시활동 지원 등 주민들의 의견도 포함됐다.

나아가 ▲설계시 제시한 기준치 준수 여부 검증 후 최종 공장등록을 승인한다는 고창군의 단호한 입장도 강조했다. 단일 조건 미이행시 공장준공 등록을 불허한다는 내용도 빠뜨리지 않았다. 동우팜측은 고창군의 이 같은 방침에 동의했고 환경보전, 지역인재 채용, 약취 배출방지시설 완비 등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적극 동참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기업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 만큼 고창군은 '주민공론회'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주민의 입장에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고창군의 기업유치 목적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증대 ▲철저한 환경보전 ▲주민건강 보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도 고창군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현재 '기업유치'는 자자체에겐 피할 수 없는 현실과제다.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내 힘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제공한다. 전국 자자체들이 기업유치에 총력 전을 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사설

## 롯데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문제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다시 롯데와 손잡기로 했다며 2년 전 내놓은 개발 계획보다 좀 더 구체화된 개발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롯데에 유리하게 개발 계획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논란이다.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부지의 개발 계획안을 보면 부지 동쪽에는 서신동에 있는 현 롯데백화점의 두 배 규모인 지하 4층 지상 7층의 백화점을 들어선다.

백화점 서쪽에는 추후 전주시에 기부하기로 한 지하 4층 지상 6층의 전시·컨벤션 센터와 200실 규모의 호텔이 자리한다. 아구장 전체와 종합경기장 75%는 보존되고 미술관이 새로 건립된다. 전주시는 현재 전시·컨벤션 센터와 호텔, 백화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 신청한 상태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기본 구상안은 앞으로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감한 부분이 많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음주운전 시의원에 징역 2년 구형

전주지검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어느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의원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의원은 지난해 4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상대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4%였다.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그에게 1년간 당원 자격정지를 명령했다.

전북 도내 일부 시군의원들이 도덕성 문제가 종종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도내 또 다른 어느 시의원은 과거 자신이 의장 재임 시절 전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까지 만들었다.

이 조례에는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 등이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주로 음주 청정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 예방 교육 등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든 장본인이 음주사고를 일으켰다. 전전한 음주문

밝혔던 개발 계획과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다.

백화점과 컨벤션, 호텔이 들어서는 마이스 산업 부지의 면적은 4만 제곱미터에서 5만8천 제곱미터로 늘었다. 그러나 롯데에 유리하게 7층으로 높아졌다. 컨벤션 지하에는 버스 등을 같이 탈 수 있는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추가됐다.

지하에 교통 환승 센터를 지으면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롯데쇼핑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소지가 크다. 전제 사업비 또한 구체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재정사업의 규모가 1565억 원으로 예상보다 크다. 그러나 아직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것은 당초 시장의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기본 구상안은 앞으로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감한 부분이 많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